

열린 충남

Vol.103
2023
WINTER

권두언

라이즈(RISE) 체계 -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의 기회

특집

충청남도 지역·대학 현황 진단 및 시사점: 라이즈(RISE) 중심으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방향 모색: 아주자동차대학교 사례의 시사점
순천향대학교 지·산·학·관 협력 성공사례 소개

현안연구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유아교육방안 제안
충청남도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플랫폼, 청년센터 현황과 운영방향

#권두언

04

라이즈(RISE) 체계 -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의 기회

이기우 | 前,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특집

07

충청남도 지역·대학 현황 진단 및 시사점: 라이즈(RISE) 중심으로

김진희 | 충남라이즈센터 초빙책임연구원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방향 모색: 아주자동차대학교 사례의 시사점

한명석 | 아주자동차대학교 자동차튜닝과 교수

순천향대학교 지·산·학·관 협력 성공사례 소개

이용석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처장 (생명과학과 교수)

#현안연구

25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유아교육방안 제안

윤향희 |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

충청남도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플랫폼, 청년센터 현황과 운영방향

전지훈 | 충남라이즈센터 초빙책임연구원

#열린마당

39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활용법

이상희 | 천안YMCA 시민사업팀장

#언론이 바라본 충남

44

한반도 중심 충남...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핵심으로 우뚝

이종익 | 서울신문 기자

#인권 A to Z

48

조직 내 소통과 인권 실태를 진단해 본 2023년 충남연구원만의 인권영향평가

충남연구원 | 강마야, 이민정, 임형빈, 장창석, 정봉희, 제수진, 최윤정

#연구원 소식

54

충남 서남부권 균형발전... 농업·농촌 패러다임 전환 필요

충남 교통인프라 구축 등... 국가 균형발전 견인

충남연구원, K-국방의 미래 위한 선제적 대응 모색

충남연구원, 2023 연구성과 발표회 성황리에 마무리

스마트폰으로도
[열린충남]을
만나보세요



2023 WINTER Vol.103



04 권두언
라이즈(RISE) 체계 -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의 기회



07 특집
충청남도 지역·대학 현황 진단 및 시사점:
라이즈(RISE) 중심으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방향 모색:
아주자동차대학교 사례의 시사점
순천향대학교 지·산·학·관 협력 성공사례 소개



25 현안연구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유아교육방안 제안



39 열린마당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활용법



44 언론이 바꾼 충남
한반도 중심 충남...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핵심으로 우뚝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48 인권 A to Z
조직 내 소통과 인권 실태를 진단해 본
2023년 충남연구원만의 인권영향평가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유동훈 **발행처** 충남연구원 **편집위원장** 오용준 **편집위원** 권미정, 김진영, 백운성, 여형범, 조봉운 **에디터** 정봉희, 김선영
주소 우)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홍동) **전화** 041.840.1114 **팩스** 041.840.1129 **홈페이지** www.cni.re.kr **편집제작** 천안인쇄주식회사
문의사항은 goforit@cni.re.kr로 연락바랍니다.

이기우

라이즈(RISE) 체계 –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의 기회



대한민국은 이미 소멸 중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닌, 엄연한 현실이 된 듯하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저출생 기조가 심화되면서 0.60 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올해 31만명에 불과하던 대학 입학 가능 인구는 2039년에는 19만으로 주저앉은 뒤 16만~17만명으로 굳어질 전망이다. 이미 수도권 인재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지역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던 지역에 인구 자연 감소는 이제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치명타가 되고 있다.



이기우 |
前,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는 지난 2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50% 이상을 과감히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RISE)를 발표했다. 그간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대학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과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만으로는 지역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인재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과 중앙이 함께하는 지역인재양성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지자체의 권한 강화는 지역 위기 극복에 상당히 고무적일 수밖에 없다. 지자체는 지역의 인구, 사회, 경제 및 산업 현황을 잘 알고 있어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 수요를 잘 파악할 수 있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산업체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지역별로 직면하고 있는 현안문제들이나 당장 해결해야 할 긴급한 이슈들은 다룰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가 교두보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대학-산업계-연구기관-지역 간 긴밀한 스킨십을 통해 유연하고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

비수도권 14개 지역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RISE)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충남 또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라이즈(RISE)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충남도는 17개 시도 최초로 대학 관련 업무를 재정비하여 라이즈(RISE) 추진과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대학지원 전담부서(고등교육정책담당관)를 설치하였다. 또한, 지난 9월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사업을 관리하고 선정·평가 등을 전담하는 기관인 충남RISE센터를 충남연구원 내에 개소하였다. 충남 라이즈(RISE)의 성공적인 안착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마냥 장밋빛 전망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미 지자체 권한 이양이 지역 위기 극복의 만능키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심지어 지역 대학의 생존을 넘어 지역 소멸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겨 책임 소재를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적 시각마저 존재한다. 중앙정부는 지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때론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은 현재의 위기 앞에 단결력으로 똘똘 뭉쳐 지자체, 대학, 산업계, 연구소 등이 상호 협력하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고난을 마주하게 될 테지만 이에 좌절하지 않고 슬기롭게 이겨내 나간다면 분명 지금의 위기는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특 집



충청남도 지역·대학 현황 진단 및 시사점: 라이즈(RISE) 중심으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방향 모색: 아주자동차대학교 사례의 시사점
순천향대학교 지·산·학·관 협력 성공사례 소개

충청남도 지역 · 대학 현황 진단 및 시사점

- 라이즈(RISE) 중심으로 -

김진희 | 충남라이즈센터 초빙책임연구원

들어가며

- 저출산에 따른 학령기 인구감소와 미충원 신입생 증가에 따라 지방대학 위기 심화
 - '23년 전국 대학 입학 가능 인구는 31만 6623명으로 22년 대비 2만 2920명 줄었으며 '39년 전국 대학 입학자수는 19만 4371명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
 - '21년 전국 대학 미충원 신입생 4만 586명 중 3만 458명(75%)가 지방대학에 해당하며(교육부, 2023), '40년 50% 이상의 대학에서 미충원 발생 예상
- '19년 이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으며(국토연구원, 2021) 지속적인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로 지역 경제 활력 저하 및 지역 소멸 위험 심화
 - 법정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 지역임(행정안전부, 2021)
 -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동은 대학 진학단계(10대)에서 1차 유출된 이후, 구직단계(20대)에서 2차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21)
- 지역과 대학의 공동 위기 극복을 위해 '25년 17개 시도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본격 도입 예정
 -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지원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라이즈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 필요
- 이에 이 글에서는 충청남도 지역 및 대학의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 위기 극복과 혁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라이즈를 중심으로 모색해 보고자 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주요 내용

■ 라이즈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하여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전체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고 지역 수요 반영 및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5개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
 - * RIS(지역혁신), LINC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학활성화 사업
- 타 부처 및 지자체 고유의 사업과도 연계·협력을 추진하며, 지역 주도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지자체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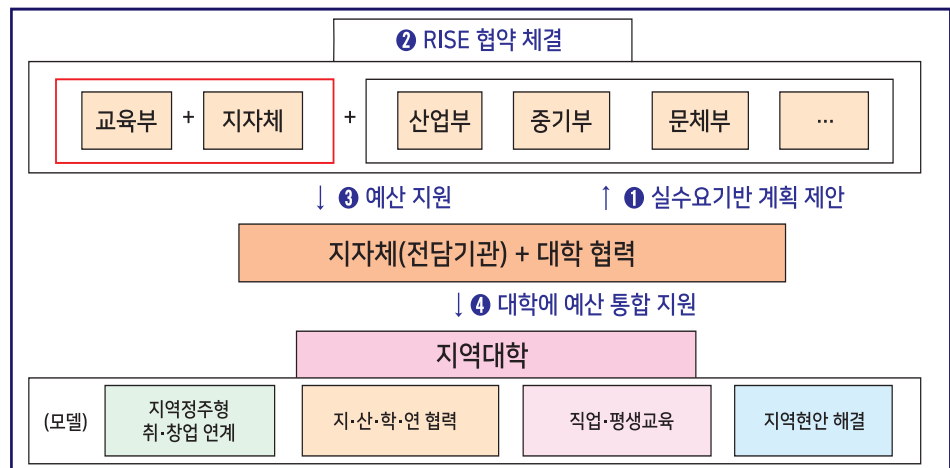
■ 지역 발전 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타 부처 지역 주도 정책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수요를 기반으로 한 지역 주도 대학지원사업 모델을 개발

- (지역정주형 취·창업 연계) 지자체와 대학의 협업을 통해 대학 연구 인프라와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창업인프라 조성 및 혁신기업 육성
- (지·산·학·연 협력)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및 연구 기술 자원 활용으로 지역맞춤형 산학협력모델 구축
- (직업·평생교육) 대학에서 보유한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 구조와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대학의 직업·평생교육 모델 발굴
- (지역현안 해결) 지역과 대학의 협력 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 사회 현안 발굴 및 개선 지원

■ 지역주도 대학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대학지원 추진체계)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부서 설치, 전담기관 지정·운영, 지역 고등교육위원회 신설을 통해 지역의 대학지원 기반 조성

[지역주도 대학지원 추진 방향]



출처: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 운영계획, 2023. 02. 01.

충청남도 지역 현황진단

- (지역주도대학지원) 시·도 지정 전담기관(비영리 법인)에 지역주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지원, 지자체 주도 계획 수립 후 대학에 재정 지원
- 전담기관은 지역주도의 대학지원 사업 선정 및 성과평가, 사업비 교부 등 집행·관리 등 수행

■ (인구구조) '18년 기준으로 충청남도 전체 인구 중 15세 미만 인구가 13.6% 15~64세 인구는 68.9%, 65세 이상은 17.5%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보임.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17년 대비 '47년 충남도 학령인구 31.7% 감소, 생산연령인구 22.3% 감소 예상(통계청, '19)

■ (청년인구) 고등학교(4.3%)에서 대학(7.3%)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3.0% 증가하였다가 대학 졸업 2년(3.8%) 후, 3.5% 감소('19,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대학이 밀집한 천안·아산 지역 중심으로 타지로부터 인구가 유입되었다가 졸업 후 일자리 부족으로 수도권 등으로 인구 유출 추정

■ (산업여건) 수출 중심 제조업,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소득 역외 유출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이며, 외생적 충격에 민감하고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음

■ (고용지표) '22년 기준 실업률 2.3%(전국 2.9%), 고용률 64.3%(전국 62.1%), 경제활동참가율 65.8%(전국 63.9%)로 전국 대비 양호

■ (인력현황) '22년 기준 지역 인력 부족률은 3.8%(전국 3.5%)로 전국보다 높은 상황이고(고용노동부, 2022) '21년 기준 산업기술인력의 부족률은 약 1.1%(전국 2.2%)로 전국 대비 낮은 수준(산업자원통상부, 2022)이나 '15년(1.4%) 이후 부족률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 (12대 주력산업 인력 현황) 충남의 12대 주력산업 학력 수준 별 부족률은 고졸(1.4%), 전문학사(1.2%), 학사(0.9%), 석사(0.7%)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 생산 인력부족 분야와 전문 인력의 부족 분야가 다른 양상을 보임(산업자원통상부, 2022)

- 고졸은 화학, 자동차, 기계 순으로 부족 인원이 많았고, 전문학사는 기계, 화학, 자동차 순으로 나타남
- 학사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순으로 인원이 부족했으며 석·박사의 경우 자동차, 반도체, 소프트웨어 순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충청남도 대학 현황진단

■ (대학 및 학생수) 전국 324개 대학의 8.95%에 해당하는 29개 대학이 있으며, 학생 13,3만명 재학 중으로 전국 5위 규모임

◦ 대학 및 대학생수 분포를 보면 충남 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충남 도내 불균형 존재

■ (신입생 총원률) '22년 기준 신입생 총원률은 4년제 대학은 평균 105.28%(전국 101.34%)로 전국 대비 양호하나, 전문대학은 평균 89.74%(전국 108.07%)로 낮은 편임

■ (졸업생 취업률) '21년 기준 졸업생 취업률은 4년제 대학 평균 63.1%(전국 59.5%), 전문대 평균 75.2%(전국 70.8%)로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

■ (산학협력) 산학협력 교육 활동, 특허 출원 수, 창업 지원 수준 등이 타 지역 대비 낮은 수준을 보임

◦ (산학협력 교육) 캡스톤디자인 개설 대학 비율은 최근 3년간 비교적 꾸준히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현장실습, 주문식 교육과정 수와 참여 학생 수 등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특허 출원) 대전과 충북의 경우,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수가 늘고 있는 반면, 충남은 해외의 경우 '19년 대비 '21년에 증가하였으나 국내는 감소하는 추세임

◦ (창업) 창업 관련 강좌 및 경진대회 등 창업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 차원의 꾸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원액, 공간, 전담인력 등 지원 수준은 전국 평균 대비 낮음

■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 2023년 기준 라이즈로 통합 예정인 5개 사업에 총 45개 대학(중복포함)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예산액은 약 857.5억원임

◦ 총 예산액 857.5억원은 국비가 771.8억원(90%), 도비가 79.8억원(9.3%), 시군비 5.9억원(0.7%)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가며

■ 청년인구 이동 경로를 보면 수도권 외 타 지역과 달리 충남은 수도권에 인접하고 대학 여석이 많아 대학 진학단계에 인구가 유입되는 경향을 보임. 이때 유입된 인재의 구직단계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필요

◦ 대학의 유희부지 및 대학 및 지역의 기술·인력 등 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대학 내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대학 창업교육이 실천 창업 및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

◦ 청년취업 활성화, 고숙련 인재 유치 등을 위해 산업단지 종사자 가구의 삶의 패턴과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열악한 산업단지 정주 환경 개선

■ **충남 주력산업 분야별 강점을 가진 대학을 특화해 지원하고 지자체 주도하에 지역 과
대학과 산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지·산·학 협력 생태계 구축 필요**

- 지역 수요 중심의 연구 분야를 특화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지·산·학 협력 특성화 모델 개발

■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총원율은 전국 대비 양호한 편이지만 전문대학은 전국 대비
많이 낮으며 4년제 대학과의 격차가 큼 또한 충남의 12대 주력산업에서 고졸과
전문학사 인력 부족률은 1% 이상을 보임. 따라서 고등학교부터 전문대학, 일반대학,
지역산업체로 이어지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지역의 고등학교-전문대학-일반대학-지역산업체 간 직업교육과정 연계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조성
- 직업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부터 기업의 실무교육과 기초학습 능력과 직무능력을 개발 이론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 후에는 협약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에서 동일한 이원화 교육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 등 모색

■ **충남 지역 북부권과 그 외 권역(서해안권, 내륙권, 남부권) 간 경쟁력 격차 심화로
인해 지역 내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각종 공약과 역점과제 등 지역현안과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연결한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필요**

- 권역별 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생산가능인구를 확충을 위해 지역과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내 신·중장년층의 구직과 재취업, 전직 도모를 촉진하는 대학의 지역특화 평생·직업교육 모형 발굴

■ **전국 대비 신입생·총원율은 높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17년 대비 '47년
충남도 학령인구 31.7% 감소가 예상되는바, 지역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지역 정주형 산업인력 양성 체계 구축 필요**

- 지자체, 지역대학, 기업이 함께 지역 맞춤형 유학생 유치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해외 주정부와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대학 간 교류 확대 추진
- 입국 단계부터 졸업 후 지역 내 정착까지 지원하는 지역 정주형 대학교육-취업 연계 체계를 마련하여 우수한 해외 인재 유입을 유도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방향 모색: 아주자동차대학교 사례의 시사점

한명석 | 아주자동차대학교 자동차튜닝과 교수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선포(‘23.9.14.)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표적인 내용으로 2025년부터 지역 주도로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시행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을 교육감에게 이양하였듯이 대학교육도 광역시·도 자체 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5년까지 RIS(지역혁신사업) 등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50% 이상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여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로 전면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은 대학에 기대하는 바가 이전에 대학의 고유역할인 교육, 연구, 봉사 등에 나아가 지역사회의 문제나 현실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까지 요구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 소멸의 문제에 있어 대학과 지역의 문제 해결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RISE 체계의 방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주자동차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RISE 체계의 방향: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추진

RISE는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RIS와는 다르게 수도권 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RIS는 사업의 형태이지만 RISE는 시스템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도하고 지역대학을 허브로 하여 교육청, 산업계 등과 협력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혁신을 유도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광역시·도별 RISE 계획 수립시 지역의 산업·문화·지역혁신 정책과 연계된 지역대학 지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토대로 한 RISE의 시범지역은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시·도가 선정되어, 이들 지역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RISE 체계를 구축하고 시범 운영하게 된다.

시범지역의 RISE 프로젝트 사례는 아래 표와 같이 공통적으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하여 대학의 역할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 시범지역 RISE 프로젝트 사례

| 시·도 | 프로젝트(안) | 주요내용 |
|-----|------------------------------|---|
| 부산 | 지역발전연계 인재육성 생태계 구축 |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창직도전형 스타트업 인재양성, 평생직업교육훈련 활성화 지원, 지역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
| 대구 | 지역산업 대전환 열린대학 | 특성화 기반 파워풀 인재양성, 지산학협력 산업혁신 플랫폼 구축, 혁신도시 BIT 캠퍼스, 동성로 캠퍼스타운 등 지역과제 공동해결 |
| 충북 | 충북형 CO-Design 4+1 프로젝트 | 주력산업 특화대학, R&D 기반 혁신 선도대학, 평생직업교육 앵커대학, K-컬처 혁신대학, 지속가능 혁신 플랫폼 구축 |
| 전남 | 지역산업혁신 챌린지 | 주력산업(조선, 화학, 스마트팜)+미래산업(에너지, 우주항공) 연계 발전 플랫폼 구축 및 글로벌 인재 허브센터(외국인 유학생 지원) 설치·운영, 지역현안 해결 리빙랩 지원 |
| 전북 | 청년활력타운 | 수요맞춤 주거공간(주거·문화·복지 결합)을 다부처(국토부, 행안부, 문체부) 협업으로 제공, 전북시민대학 운영 등 |
| 경남 | 글로벌 연구 특성화 대학 | 항공우주, 스마트기계, 방위산업 연구중심 대학 육성, 기업연구소 유치, 지역과 대학의 유휴 기반시설 (인프라) 활용(연구 특화 워케이션 클러스터 조성) |
| 경북 | 1시군-1대학- 1특성화 | 지역동맹+대학동맹으로 교육·취업·주거·결혼 정책 통합 지원 ※ 지방정부 가용재원의 10%투자(10년간)+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17개 시도가 함께 성공적인 라이즈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023. 08. 14.

기존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춘 연계보다는 대학 특성에 맞춘 사업 중심이다. 따라서 향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가 운영해야 하는 상황인 가운데 RISE 목적과 대학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연계 모색을 위해 충청남도는 지난 3월부터 도지사-지역대학 총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산업과 도정 정책이 연계된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 교육에 특화한 대학: 아주자동차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는 충청남도와 보령시의 지역 특화 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미래 자동차 모빌리티 분야를 특화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자동차특성화대학으로 미래자동차공학부 단일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시스템 도입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 확보를 위해 지역특화비자 취업박람회, 로컬 취업 성공 프로그램 등 국제 교육·교류를 통해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정주형 유학 프로그램 기반 인력 양성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생 맞춤형 경험 기반 학습(AdaptiveEBL: Adaptive Experience Based Learning), Ajou파란+ 교육모델 등의 도입을 통해 융합과 포용을 통한 자동차 창의·융합 경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일학과 체제의 장점을 바탕으로 미래자동차공학부 6개 세부 전공으로 구성된 자동차 모빌리티 특성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자동차디자인에서부터 개발(설계·제작), 수입자동차정비서비스, 자동차튜닝, 친환경모빌리티, 전기자동차, 모터스포츠 등 자동차와 관련한 전 과정을 망라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대학 특성화 체제와 연계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자동차공학과'를 개설했고, 2022년에는 전문대 최초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개설·운영하면서 '전문학사-학사-전문기술석사'로 이어지는 미래 모빌리티 전문기술 인력 양성 체제를 완성했다. 또한, 2023년에는 전기차 시장 보편화 등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수입자동차 서비스 전공 등도 신설하였다.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자동차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2012년 BMW그룹코리아를 시작으로 아우디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 토요타-렉서스, 볼보 등 세계적 기업과 산학협력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BMW 맞춤형 Apprentice Program' 수업 개설을 통한 교육과 채용 연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선발된 학생에게 BMW 산업체 인사의 현장 노하우 및 실무에 필요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BMW 맞춤형 커리큘럼을 구성함으로써 교육생이 숙련된 테크니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와는 '모바일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전문 강사가 매주 학교를 방문해 이론 및 실습지도에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전문 테크니션 양성 프로그램인 AMT(Automotive Mechatronic Traineeship) 교육을 실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교육 수료 후 우수 학생은 회사의 지원으로 독일 본사 탐방을 다녀오기도 했다. 올해 9월에는 한국 렉서스·토요타 전동화 트레이닝 아카데미를 열고 전용 실습장 운영을 시작했다. 이로써 6개의 주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실습체계를 완비하게 되었다.

또한, 아주자동차대학교의 고유 자동차 문화제로 자리 잡은 AMC 모터 페스티벌을 보령시와 확대 개최해 지역 자동차 문화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핀란드, 인도네시아 등 해외 대학에서도 아주자동차대학교의 교육체제를 연구할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모빌리티 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

시사점

대학 특성화 방향 모색을 위해 아주자동차대학교 사례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 특화 산업 고숙련 전문 기술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학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분야별 전문기술을 전수해 정주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하는 역할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이 지역 산업과 연계한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로 유학 온 학생들에게 지역 정주 성장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와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산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산업체와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산학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지역 대학의 경쟁력 또한 강화되는 선순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에 있어 대학은 특성화가 충분히 이루어야 할뿐 아니라 충남도내 대학들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기보다는 동료라 생각하고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이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RISE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결국 특화된 대학 간 공유협업의 성과가 우수 인재의 지역 정주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림 1] BMW 교육장



[그림 2] 서울 모빌리티쇼 참가



[그림 3] 보령 AMC 모터페스티벌

순천향대학교 지·산·학·관 협력 성공사례 소개

이용석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처장 (생명과학과 교수)

2023년 청년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충남도 내의 청년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아산시의 청년인구수는 유일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친화 도시조성 등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즉 주거, 생활, 문화, 복지 등 전 분야에서 지산학(지자체, 산업체, 대학) 협력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분석된다. 순천향대학교는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소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4년 3월에 설립된 이후 2006년 고부가생물소재 산업화지원지역혁신센터 및 화장품 품질검사기관에 지정되었으며, 2012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사업에 선정되면서 발전속도가 가속화 되기 시작하였다.

2014년 순천향대학교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2015년 및 2021년 이공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조직재생연구소 및 한국자생동물자원활용 융복합연구소, 2020년 4월 융합보안핵심인재 양성사업에 선정되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2021년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또한 선정되어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019년 및 2022년 핵심연구지원센터에 선정이 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의생명과학 핵심연구지원센터 및 생명자원 바이오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연구지원센터는 순천향대학교 교내에 있는 핵심장비들을 집적화 하여 그 활용도를 증대하는 사업으로 대학이나 기업 연구자에게 심도 있는 분석 서비스와 R&D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산·학·연 협력의 초석을 다졌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반하에 MRC(의학선도연구센터), CRC(융합분야선도연구센터) 및 BRL(기초연구실) 등 대형집단연구과제를 수주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게 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메타플랫폼화 원천기술 개발”에 선정되어 지역특화 전주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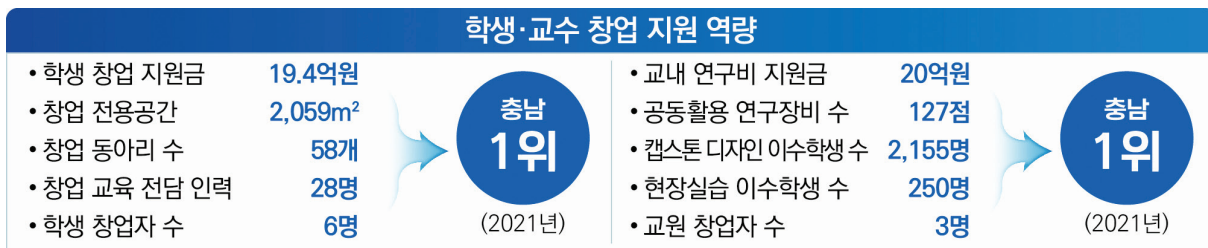
[표 1]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요사업 및 연혁

| 년도 | 대표사업명 | 사업특성 |
|----------|--|---------|
| 2004년 3월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설립 | - |
| 2006년 9월 | 고부가생물소재 산업화지원지역혁신센터 화장품품질검사기관지정 | 산학연 협력 |
| 2012년 5월 |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사업 선정 | 산학연 협력 |
| 2014년 7월 | 순천향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설립 | 산학연 협력 |
| 2015년 1월 | 지역특화청년 무역전문가양성사업 선정 | 인력양성 |
| 2015년 9월 |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조직재생연구소) 선정 | 인력양성 |
| 2017년 2월 |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환경 및 신뢰성 분야) | 산학연 협력 |
| 2018년 4월 |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 선정 | 산학연 협력 |
| 2019년 6월 | 핵심연구지원센터 (교육부) (의생명과학 핵심연구지원센터) 선정 | 장비활용사업 |
| 2020년 3월 |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 선정 | 창업 |
| 2020년 4월 | 융합보안핵심인재 양성사업 선정 | 전문인력양성 |
| 2020년 5월 |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 인력양성 |
| 2020년 6월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선정(RGB 사업단) | 산학연 협력 |
| 2021년 4월 |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 | 인력양성 |
| 2021년 6월 |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한국자생동물자원활용융복합연구소) 선정 | 전문인력양성 |
| 2022년 3월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 3.0) 선정 | 산학연 협력 |
| 2022년 6월 | 핵심연구지원센터 (교육부) (생명자원 바이오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연구지원센터) 선정 | 장비활용사업 |
| 2023년 4월 |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메타플랫폼화 원천기술 개발) 선정 | 지산학연 협력 |
| 2023년 6월 | MRC, CRC 및 BRL 집단연구과제 선정 | 산학연 협력 |

산학협력 역량강화를 통한 주요실적 및 성공사례

이러한 기반을 구축한 순천향대학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2022) 주관기관 선정 및 각종 산학협력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기업 기술혁신 및 사업화 지원 우수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업/창업지원을 위한 우수한 R&D 역량 또한 확보하고 있으며, SCH기술지주회사(자회사 29개, 충청권 1위)를 통해 자회사의 우수한 기술을 이전하고 신기술창업 등의 성과를 다양하게 확산하고 있다. 또한, 초기창업패키지사업, 전주기적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 다수의 사업을 통해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연계하여 대학 내 공간에 기업을 입주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의 수준은 주요역점 분야인 충남지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교육취창업, 산학협력, 기업지원인증 등의 분야에서 각종 수상을 하는 등 외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 지원 체계 | 교수 | 학생 | 산업체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친화형 교원업적평가 · 창업휴(겸)직제, 연구실적대체 제도 · 창업중점교원제, 산학협력포상제도 · 기술이전 인센티브, 자기개발 휴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복수학위제도 · 창업휴학제/창업현장실습 · 창업대체학점인정/창업학점교류제 · 현장실습/캡스톤디자인/메이커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어달리기식 전주기 기업지원 시스템 · 대학 내 도시형 공장 설치 지원 · 산업체 재직자 학위 취득 지원 · 국내/외 공인 시험 지원 및 인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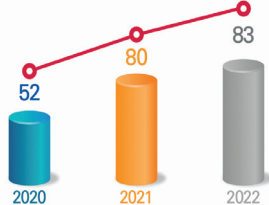
| 주요실적 | | | |
|--------|--|--------|--|
| 교육·취창업 | 사립대학 경영개선 최우수대학 “지속가능혁신(Sustainable Innovation)” | 교육부 | |
| | 대한민국 창조경영상(교육혁신부분) | 중앙일보 | |
| |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우수 인증 7년 연속 선정 | 교육부 | |
| | 대학혁신지원사업 최우수대학 | 교육부 | |
|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14년 연속 선정 | 교육부 | |
| | 청년드림 대학평가 최우수대학 4년 연속 선정 | 동아일보 | |
| | 취·창업 대학 평가 전국 10위 | 한국경제신문 | |

| 주요실적 | | | |
|----------------|----------------------------------|---|---|
| 산학 협력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우수대학 3년 연속 선정 | 고용노동부 |  |
| |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2년 연속 세계 200위권 | THE | |
| | 중소벤처기업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 중소벤처기업부 | |
| | 일학습병행제(IPP)우수사례 대상 | 고용노동부 | |
| | BK21 FOUR 5개 사업단 선정 | 교육부 | |
| | 2022 한국PR대상 최우수상 | 한국PR협회 | |
| | R&D부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교원창업기업 에스코트앤케어 'CES 2023' 혁신상 수상 | CES 2023 | |
|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LINC3.0)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 |
| 기업 지원 인증 | 2023 초기창업패키지사업 선정(4년) | 중소벤처기업부 |  |
| | KOLAS인정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 산자부/국가기술표준원 | |
| | 안전성 검사기관 인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 화장품품질검사기관 인증 | 식약처 | |
| | ISO 9001 | ITS (International Technology Standard) | |
| | ISO 14001 | | |

입주기업의 숫자, 입주기업의 매출액, 입주기업의 고용인원은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지주회사의 숫자, 매출액, 고용인력도 대부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입주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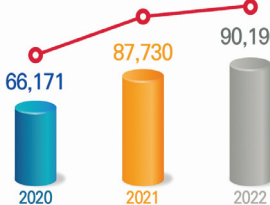
(단위: 개)



| 연도 | 입주기업 수 (개) |
|------|------------|
| 2020 | 52 |
| 2021 | 80 |
| 2022 | 83 |

입주기업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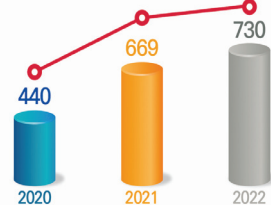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연도 | 입주기업 매출액 (백만원) |
|------|----------------|
| 2020 | 66,171 |
| 2021 | 87,730 |
| 2022 | 90,196 |

입주기업 고용인원

(단위: 명)



| 연도 | 입주기업 고용인원 (명) |
|------|---------------|
| 2020 | 440 |
| 2021 | 669 |
| 2022 | 730 |

| 연도 | 자회사 수 | | 자회사 매출액 | | 자회사 고용인력 | |
|------|-------|----|---------|----|----------|----|
| | 실적(개) | 순위 | 실적(억원) | 순위 | 실적(명) | 순위 |
| 2020 | 30 | 1위 | 62.7 | 1위 | 61 | 1위 |
| 2021 | 30 | 1위 | 81.6 | 1위 | 96 | 1위 |
| 2022 | 29 | 1위 | 106.9 | 1위 | 76 | 2위 |

* 20-22년도 대학정보공시 기준(순위는 충청권 사립대학 기준)

그러한 결과는 창업지원, 기술지주회사, 기업지원에 있어서 매우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내어 소개하고자 한다. 창업지원결과인 ㈜크레코의 경우 학생 창업동아리 기반 기술창업을 한 예시의 기업인데 패시브스크린을 개발하여 인천공항, 인천교통공사 등에서 원격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고화질의 시민소통창을 보여준 기업이며, ㈜엘케이벤처스는 융합보안대학원과 인생네컷이라는 제품을 개발하여 연매출 112억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 | | |
|--|--|--|
| 창 업 지 원 우 수 사 래 | <p>■ (주)크레스코글로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시 MOU 및 투자 유치 기반 성장 가속화 (아산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1위 선정) ◦ 학생 창업동아리(뉴미디어) 기반 기술창업 ◦ 패시브스크린 개발 및 창업 ◦ 시제품 제작 및 투자 유치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디지털소통팀 설치 (20.10.6.) ◦ 인천교통공사 갈산, 인천시청역 설치 (21.2.9.) ◦ 한국자동차연구원 이노폴리스 캠퍼스 지원 (22.5.) |  |
| | <p>■ (주)엘케이벤처스 : 인생네컷</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112억원 매출 달성 (※'18년 창업, 매출 2.5억원 → 19년 37억원 → 20년 124억원) ◦ 산학 공동연구과제 진행(2019.2.~현재) ◦ 융합보안대학원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 ◦ 스튜디오 제어, 콘텐츠 분석 등 공동 기술개발 및 인생네컷 공동연구실 구축 |  |
| 기 업 지 원 우 수 사 래 | <p>■ (주)바이오시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도약('21 43억원 매출달성) ◦ RGB Campus(산학협력단지) 사업: Co-Lab 운영 ◦ PMC센터/의과대학 공동연구과제 수행 ◦ 미백 군주 기술개발(특허출원)/기술이전 ◦ 인체 적용시험,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 |  |
| | <p>■ (주)NSH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매출액 94억원 달성 ◦ 산학공동연구과제 수행 및 기술개발 ◦ 융합보안 공동프로젝트 수행 및 기술개발 ◦ 사이버 물리-모빌리티 기술개발 |  |
| | <p>■ (주)한화토탈 기술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료 7.1억원 ◦ (주)한화토탈 기술이전 기반 신규 사업 진출 추진 ◦ 순천향대학교 이** 교수팀 공동연구 수행 ◦ 2차전지 및 산업재 관련 기술개발 ◦ 기술이전(특허 양도), 기술자문 진행 기술 |  |

| | |
|--|---|
| <p>■ 엘지바이오(주) [舊한국초임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 의존 향산화제(아스타잔틴)의 국내 생산단지 구축 진행 ◦ SCH기술지주회사 R&BD 지원사업 6억원 투자 ◦ SCH기술지주회사 2천만원 자체 투자 ◦ 국내 최초 해마토코쿠스 생산 시설 구축 ◦ 11.6억원 외부 투자금 신규 유치 |  <p>【제조장비】 【배양 준비 작업】 【대량배양 (10~15일)】</p> |
| <p>■ (주)스텝바이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온 단백질 타깃 항암제 및 심혈관질환 치료제 개발 ◦ 보유 특허에 대한 기술가치가 각각 1,000억원과 239억원으로 평가 ◦ 교육부 주관 『2022년 대학 기술사업화 스캐일업 데모데이』 은상 수상 ◦ 2022년도 5억원 외부 투자금 신규 유치 | <p>특허기술가치평가 보고서</p> <p>대표특허: 프리온 단백질 '불타박단'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 조성물 (한국특허출원번호: 10-2020-00000000)</p> <p>2023. 09. 24</p> <p>평가액: 106,040백만 원</p> <p>대량배양: 23,905백만 원</p> |
| <p>■ (주)아쿠아바이오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리와 어류의 종자를 생산하고 대량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구축 ◦ 충청남도 태안에 대형 양식장(약 6만평 규모)을 운영하고 제주수산과학원 미래양식센터와 공동 생산 ◦ 티문X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온라인 기획전을 연계하여 매출 증대 (23년 25억원 매출 목표) |  <p>식품안전기술개발사업(제1차) - 우수기업 C, 대왕자바리 회 450g (초장, 외사비 포함) 3,300원 / 1000g 65,000원</p> |

기업지원 우수사례로는 화장품 제조회사인 (주)바이오시엠이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교내의 PMC와의 공동연구, 산학연협력단지 사업의 일환으로 Co-Lab을 운영하며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을 하여 43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사례 및 융합보안 공동프로젝트 수행 및 기술개발을 하여 매출액 94억원을 달성한 (주)NSHC의 사례 등이 있다.

또한 기술지주회사의 성과로는 해외시장에 완전히 의존하던 향산화제 아스타잔틴의 국내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인 엘지바이오(주)가 순천향대 및 충남의 다른 기업들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인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한몫을 하여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는 현황이며, (주)스텝바이오는 프리온 단백질 타깃 항암제 및 심혈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보유특허에 대한 가치가 1000억원, 기술가치가 239억원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주)아쿠아바이오텍은 소위 다금바리로 많이 알려진 바리와 어류의 종자를 생산하는 스마트팜을 구축하여 23년 25억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RISE 체계로의 변화

교육부는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으로 대전환, 대학·지역·국가의 경쟁력을 높인다!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인 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2023년 5개 지자체 시범운영 뒤 2025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50%를 지역주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R&D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획되었으며, 인구절벽, 지역소멸, 지역 난제해결을 위한 중앙부처간 대학지원의 벽을 허물기 위하여 도출 되어졌다.

이러한 RISE 체계로의 변화에 따라 대학들은 지역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체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더 소통하며 지역혁신의 엔진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유아교육방안 제안

윤향희 |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

유아기 환경교육 필요성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혼돈은 미래세대에 직면할 문제이며 지구 온도상승으로 인해 지구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어 생태계의 파괴를 늦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으로 기후변화 위기의 대응을 위해 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실천 가능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유아기 환경교육은 초·중·고의 환경교육과는 차별적 개념 접근이 요구된다.

유아기 환경교육은 1990년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으로 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시작되었으며 유아의 환경교육을 위한 교사의 환경교육과 이와 관련된 교육도 필요하게 되었다. 유아의 자연을 활용한 환경교육은 자연과 타인 그리고 생명공동체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배려 등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내면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현상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아에게 친숙한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차원의 교육경험을 제공할 때 유아의 자연환경에 대한 실천적 역량은 증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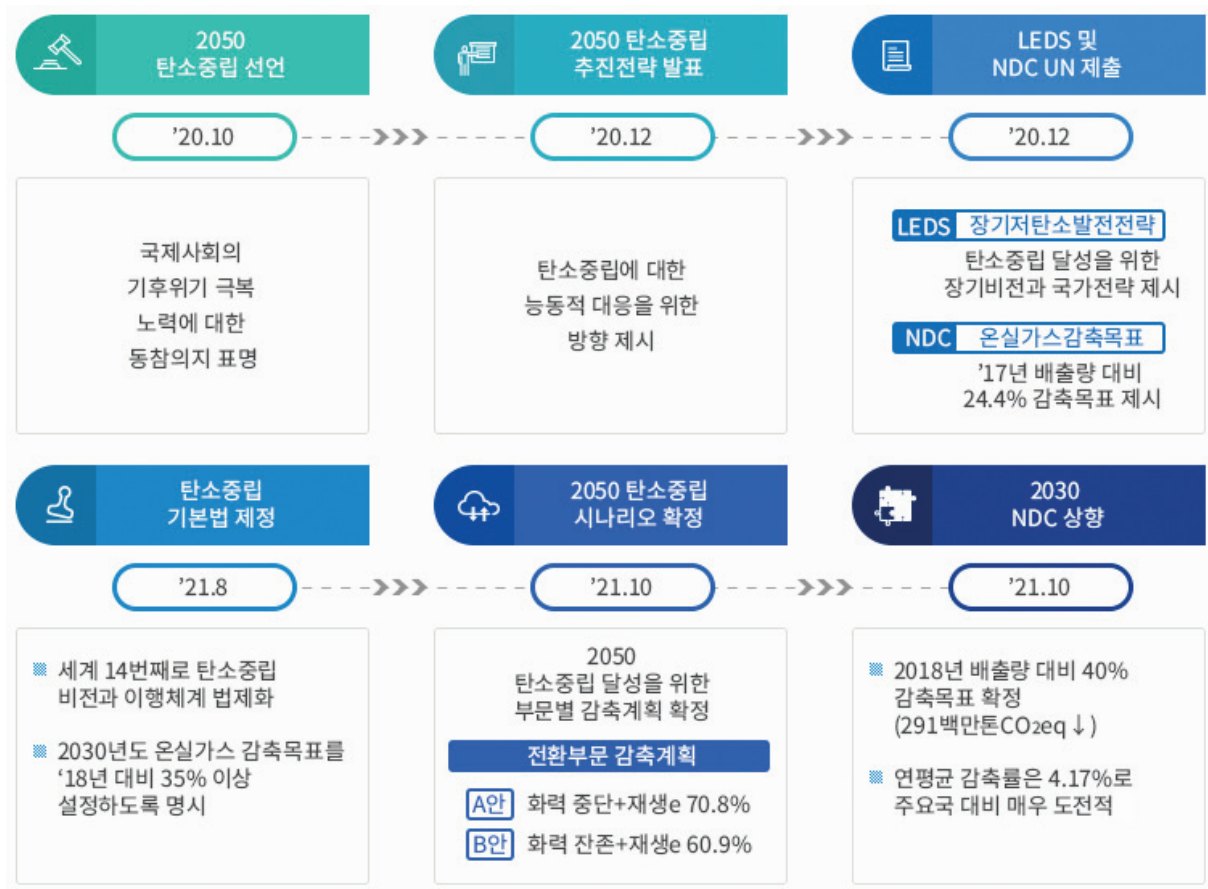
이를 위해 당진시 유아 탄소중립 환경교육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의 검토를 통해 유아의 탄소중립교육의 방향으로 유아의 환경교육에 용이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방향을 제안하고 유아의 특성을 활용한 지속적 환경 지킴이 활용을 통한 교육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유아교육을 통한 조기 탄소 중립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탄소중립과 관련된 환경교육과정 마련 그리고 교사의 환경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탄소배출현상에 따른 탄소중립 관련 정책

지구의 탄소는 다양한 방법으로 순환되는데 대기에 있는 탄소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하며 이산화탄소는 빗물이 녹거나 바닷물이나 호수 그리고 강물 등에 녹아들어 다양한 곳으로 순환한다. 지구의 맨틀에 지구가 형성될 시기 저장된 탄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탄소는 화산폭발이나 열 수구를 통해 대기나 바다 속으로 방출되며 화산폭발은 대기의 탄소 양을 급격하게 증가하게 만든다. 이러한 탄소 순환은 생물과 동물에게 영향을 미치며 식물의 광합성작용에 의한 유기물을 동물이 먹으면서 탄소는 동물의 몸속에 저장된다. 먹이사슬을 통해 다른 동물이나 미생물로 이동하여 생물의 호흡을 통해 일부는 배출되어 대기로 이동하고 땅속에 묻힌 생물에게 흡수된 사체나 배설물은 높은 열과 압력을 통해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로 변화된다. 해양생물 껍질에 저장된 탄산칼슘이 침전되어 만들어진 석회석과 같이 탄소는 암석의 형태로 저장되기도 한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땅속에 있는 화석 연료를 강제로 꺼내 태우기 시작하면서 화석 연료 속 탄소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에 배출되어 지구의 온난화는 더욱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탄소제로의 전 세계 공동의지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2020년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탄소중립 2050을 선언하였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인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균형을 이루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아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아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하여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 가스는 대기 구성요소 중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화 이후 온실가스의 증가로 120여년 간 지구 평균 온도는 약 1.2%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지속된다면 2100년에는 지구온도가 약 3도 상승할 것이며 지구 온도가 2도 상승될 경우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재앙이 도래될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내외로 억제시켜야 할 것이다.

그 간의 탄소중립 추진 정책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탄소중립 추진 정책과정

출처: 한국전력공사, 탄소중립 정책, 2023.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유아의 탄소중립 환경교육

유아의 교육과정 중 환경교육으로 누리과정을 살펴보면 5개 영역과정으로 신체운동과 건강, 의사소통과 언어,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교육과정 중 자연탐구 내용범주에 탐구과정 즐기기과 자연과 더불어 살기의 교육 내용으로 주변의 동식물에 대한 관심, 생명과 자연환경,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짓기 등의 교육내용이 있다. 이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의 3세, 4세, 5세의 과학적 탐구하기의 자연현상 알아보기의 내용의 자연탐구 내용범주를 넓혀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누리과정의 내용 범주 중 연령별 자연탐구 영역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누리과정 내용범부 중 자연탐구 영역 세부내용

| 자연탐구 내용범주 | 내용 | 세부내용 | | |
|--------------|--------------|-------------------------|------------------------------|---|
| | | 3세 | 4세 | 5세 |
| 과학적 탐구하기 | 자연현상 알아보기 | 돌, 물, 흙 등 자연물에 관심을 갖는다. | 돌, 물, 흙 등 자연물의 특성과 변화를 알아본다. | 돌, 물, 흙 등 자연물의 특성과 변화를 알아본다. |
| | | 날씨에 관심을 갖는다. | 날씨와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 낮과 밤, 계절의 변화와 규칙성을 알아본다. 날씨와 기후 변화 등 자연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개정 누리과정 구성, 2019.

〈표 1〉의 자연탐구 내용범주가 누리과정에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제시된 사항을 각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역량에 따라 유아에게 교육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센터를 두어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 정보시스템 운영,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환경학교 및 환경동아리 지원으로 워크숍 및 역량강화 연수, 환경교육사 양성 지원으로 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보 지원이 되고 있다.

환경교육포털의 유아환경교육으로 유아환경교육관의 유아를 대상으로 전문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아환경교육학습장으로 수도권, 충북, 충남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교육유형은 상시교육, 가족교육, 교사교육, 행사교육이 있다. 환경교육센터의 환경교육으로 주로 쓰레기 분리 배출로부터 쓰레기로 인한 자연환경의 오염으로 토양, 수질, 대기오염과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충남에는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에서 유아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유아누리과정이 당진시 유아교육기관인 어린이집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22년 1년 교육과정 중 환경교육과 관련된 교육내용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의 변화 그리고 환경과 생활에 대한 교육으로 누리과정 프로그램에 어린이집에서 수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진시 어린이집 유아 탄소중립 교육 실태

당진시의 유아 탄소중립 교육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자 교사의 어린이집 유형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교사 1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내용은 첫 번째, 수업 진행 시 환경교육과 관련된 교육 진행, 환경교육 진행 시 유아의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 누리과정에서 환경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교육하고 있는지, 탄소중립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응답으로 어린이집 유아 환경교육으로 수업 시 환경교육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누리과정 중 가장 많이 나타난 환경교육, 환경 교육 진행 시 많이 교육되는 환경교육, 당진시의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교사의 의견 등의 답변으로 유아환경교육 진행 시 대기오염 교육이 가장 많았고 이는 당진시의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은 대기오염으로 교사가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이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

교사 면담대상자는 당진시 어린이집 3곳의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면담내용은 누리과정의 환경과 생활부분의 교육 진행 시 환경교육 진행 여부, 누리과정의 생활주제 중 계절 별 생활 주제 진행시 교육, 유아의 환경교육 진행 시 탄소중립과 관련된 교육 병행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환경교육센터의 유아환경교육의 교사 교육 참여는 없었으며, 교사를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연수 프로그램과 당진시 유아에게 적합한 탄소중립 환경교육에 대한 의견으로 교사를 위한 탄소중립에 대해 참여한 적이 없어 알 수 없으며 탄소중립 환경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동영상 등의 교육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체험학습을 통한 환경교육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답변으로 체험학습으로 학습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며 체험으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제공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이를 통해 당진시 누리과정 유아환경교육으로 탄소중립 유아환경교육의 중요성을 확보하였다. 유아기의 습관과 실천을 통한 환경교육을 필수적 사항으로 유아의 환경관련 습관과 실천을 확장시킬 수 있다.

유아 탄소중립 교육시스템 마련

당진시 유아환경교육 시스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누리과정을 기본으로 한 기관별 교육시스템 개발이 지원으로 누리과정에 나타난 과학적 탐구영역의 내용 중 자연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진시의 환경교육의 재구성과 지역에 맞는 맞춤형 환경교육을 위한 교육지원으로 환경지도사를 활용한 탄소중립과 관련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 유아교육은 누리과정 교재에 수록된 사항을 바탕으로 교사의 개인적 견해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문교육이 요구되며 예체능 교육과 같이 전문교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자연환경을 활용한 환경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에서 유아의 탄소중립 환경과 관련된 교육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유아가 경험하나 사함을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유아기 습득을 통한 지속적인 탄소중립 환경에 대한 인지를 높일 수 있고 기후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기초적인 학습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당진의 특성을 고려한 생태교육 마련으로 당진시 자연환경을 이용한 숲과 갯벌을 생태 학습원으로 조성하여 당진시 유아만의 차별적인 환경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교사의 탄소중립 환경교육 연수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 결과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받은 교사는 없었다. 교사의 탄소중립 환경교육은 유아의 탄소중립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사의 환경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당진시는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환경교육 과정 연수 지원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플랫폼, 청년센터 현황과 운영방향¹⁾

전지훈 | 충남라이즈센터 초빙책임연구원

청년시대의 주목과 정책추진의 방향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 인구감소는 21세기 이후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재원투입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경주하였다. 특히 청년 계층은 현재 한국사회의 고령화 시대 극복을 위한 핵심 주체이자 사회변화와 혁신, 발전 동력을 견인해야 하는 핵심적 자원으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높다.

대표적인 법·제도로는 2020년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을 거론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에 의하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계획 수립과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로 인해 청년정책 추진근거 마련과 컨트롤타워 구축 마련 등의 성과는 있지만 취약계층 중심의 한시적 지원, 고용·주거·복지 등 개별 정책단위 부서별 파편화 정책지원의 한계가 여전히 내재해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고용의 새로운 형태, 기후변화 등 미래 트렌드 변화에 따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종합적 차원의 삶에 기반한 대응방향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른 역대 정부의 청년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국내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내용

| 구분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
|-------|---|--|---|---|-----------------------------------|
| 정책 목표 | 외환위기 극복 실업자 종합대책 | 양극화 해소 고용 친화적 성장 | 선취업 후진학 국가고용전략회의 | 맞춤형 고용 복지 | 청년의 삶 개선 |
| 주요 특징 | 워크넷 운용 중장기 인력수급 국가인력자원개발 체계 지원 | 고용정보센터 구축 평생교육능력개발 계획 수립 고용장려금 지급 | 직업능력개발체제 평생학습체계확립 고용촉진장려금 고졸자 취업확대 |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강화 청년취창업 활성화 | 청년수당제도 도입 청년의 삶 개선 주거, 삶의 질 |

출처: 지방행정발전연구원, 2022.

1) 본 글은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충청남도 청년년센터의 운영방향과 추진사업 제안(2023)'을 요약 발췌한 것임

이처럼 과거 청년정책은 취업 및 일자리 지원분야로 한정 되었으나 현재는 경제성장의 둔화 및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인해 주거, 결혼과 출산, 양육, 부채 등으로 영역이 삶의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은 지역에 존재하는 청년들의 수요와 인식을 적극 반영한 정책 수용성 확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충청남도는 중앙 및 시군과 구분되는 정책추진방식이 요구되는데, 청년정책 수행 및 전달체계의 중간지원 기능확보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국내 청년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청년 정책의 확대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해 청년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3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서울청년허브'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이후 2015년 광주광역시, 2016년 대구광역시, 2017년 인천광역시에서 설립이 추진되었고 이후 2020년 들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확산에 따라 청년센터 설치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경상남도의 경우는 도 차원에서 2022년 청년센터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청년센터의 운영방식은 공공위탁이 주를 이루며, 일부 민간위탁 및 직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운영조직도 광역자치체마다 상이하여, 최소 4명에서 최대 20명 규모이며 대부분의 청년센터에서는 센터장 및 1~3개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년센터의 주요 사업과 활동내용을 보면 시·군·구 단위로 청년활동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강화 하는 것이 공통적이며 주요 지역별로 청년활동공간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이 공통적이다. 이러한 광역단위 청년센터의 주요 지원프로그램은 ①청년정책의 기반강화, ②청년활동 지원, ③청년성장지원, ④기타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활동 공간은 주로 코워킹스페이스, 회의 및 교육 공간, 다목적공간, 상담 공간 등으로 조성되었으며, 주로 교통입지가 양호한 도시지역의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공통적이다.

충남 시군 청년센터의 현황

현재 충남도내 시·군 청년센터는 2022년기준 2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5개 지자체(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청양군)의 경우 복수의 청년센터를 지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산시는 '청년아지트 나와유'라는 브랜드를 활용하여 4곳(온양, 배방, 탕정, 장재)의 지역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은 아직 청년센터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로 지역별 편차가 있다. 시군단위 청년센터는 천안시(백석대학교), 공주시(공주대학교)를 제외하고 직접운영 형태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대부분 위탁보다 직영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표 2] 도내 시군 청년센터 프로그램 현황('22년말 기준)

| 구분 | 시군 | 센터명 | 운영 프로그램 |
|----|-----|-----------------------|--|
| 1 | 천안시 | 천안청년센터 이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주거 지원 생활금융교육, 주거안정교육 • 청년 일자리 지원: 진로적성검사, 취업지원(사진, 자격증료, 면접정장, 스터디그룹 운영 등), 일자리정보 제공 등 • 청년 교육 지원: 자기계발 클래스, 자기인식 및 성장 프로그램 운영 • 청년 프로그램 운영: 개인상담 프로그램 운영 • 청년 네트워크 지원: 청년정책 발굴/제안 지원, 청년 모임 지원, 기자단 운영,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운영 • 청년도전프로그램 운영: 구직단념청년 발굴 및 1:1 개인상담, 프로그램 운영 |
| 2 | 천안시 | 천안청년센터 불당이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안정교육: 주거복지, 생활금융 교육 • 청년 일자리 지원: 취업지원교육 및 일자리 채용연계, 직업교육혁신지구 • 청년 교육 지원: 자기계발 클래스, 자기인식 및 성장 프로그램 운영 • 청년 프로그램 운영: 개인상담 프로그램 운영 • 청년 네트워크 지원: 청년정책 발굴/제안 지원, 청년 모임 지원, 기자단 운영,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운영 • 청년 공유공간 지원: 공간대여 및 공유공간 (갤러리, 오픈라운지, 스터디룸, 상담실 등) |
| 3 | 공주시 | 일루와 유(강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대여 및 이용 지원: 자유롭게 드나들며 휴식하고 소통하며, 일부는 공유사무공간 사용 • 프로그램 진행: 청년들간 커뮤니티 조성 지원, 정서 및 심리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
| 4 | 공주시 | 일루와 유(강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대여 및 이용 지원: 자유롭게 드나들며 휴식하고 소통하며, 일부는 공유사무공간 사용 • 프로그램 진행: 청년들간 커뮤니티 조성 지원, 정서 및 심리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
| 5 | 공주시 | 공주 청년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창업 역량강화: 취업, 창업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직무 멘토링 등 • 청년활동지원: 청년 커뮤니티 조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각종 정보 공유, 제공 • 활동공간 운영: 지역 커뮤니티 및 청년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운영 |
| 6 | 보령시 | 보령청년 커뮤니티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창업 분야: 청년무대(청년강사교육 및 육성 등), 청년경제교육 • 문화,생활 분야: 문화시장(청년 창작 예술작품, 수공예품 등 전시체험 및 판매) • 심리·소통 분야: 마음톡톡 정신건강상담 프로그램, 성착취 피해 및 위기사항 청소년 심리지원 프로그램 |
| 7 | 아산시 | 청년아지트 나와유 1호점(온양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일자리 지원: 취업 컨설팅(면접 컨설팅, 전문가 특강 등), 면접정장 무료 대여 • 청년 창업 지원 : 메이커스페이스, 공유오피스 운영 • 청년 커뮤니티 지원 : 3인 이상 청년들로 구성된 원데이 클래스, 원먼스 클래스 • 기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대여 및 공간이용 - 청년내일카드 신청 안내 및 접수 - 맞춤형 청년 지원정책 안내 및 접수 - 청년 마음상담 프로그램 운영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안내 및 접수 |

| 구분 | 시군 | 센터명 | 운영 프로그램 |
|----|-----|-----------------------|--|
| 8 | 아산시 | 청년아지트 나와유 2호점(배방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일자리 지원: 취업 컨설팅(면접 컨설팅, 전문가 특강 등), 면접정장 무료 대여 • 청년 창업 지원: 메이커스페이스, 공유오피스 운영 • 청년 커뮤니티 지원: 3인 이상 청년들로 구성된 원데이 클래스, 원먼스 클래스 • 기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대여 및 공간이용 - 청년내일카드 신청 안내 및 접수 - 맞춤형 청년 지원정책 안내 및 접수 - 청년 마음상담 프로그램 운영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안내 및 접수 |
| 9 | 아산시 | 청년아지트 나와유 3,4호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정 |
| 10 | 서산시 | 서산청년마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모임 지원: 회의실, 동아리실, 커뮤니티홀 공간대여 및 관리 • 청년 프로그램 운영: 원데이 클래스,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예정 • 청년 네트워크 지원: 청년네트워크 회의 추진 |
| 11 | 논산시 | 논산 청년문화 창작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정 |
| 12 | 계룡시 | 계룡시 청년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일자리 지원: 구직활동 상담 및 구직 지원 서비스 제공, 스터디룸 • 청년 창업 지원: 창업 공간 제공 • 청년 교육지원: 스터디룸 및 회의실, 세미나실, 강의실 • 청년 네트워크 지원: 소통, 휴식 공간 |
| 13 | 당진시 | 당진청년타운 나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창업 지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공간 제공, 상담창구 운영, 사업활동비 지원 등 • 청년 주거 지원: 관외 전입 청년 창업가 및 창업농 대상 생활거주지 지원 • 맞춤형 청년 인턴제: 취업 전 근무기회 제공 및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3D프린팅기, 레이저커터기 등 교육, 1인 미디어 슛폼 콘텐츠 제작과정 등 |
| 14 | 당진시 | 미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정 |
| 15 | 금산군 | 청년활력공간 청년la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대여 |
| 16 | 부여군 | 부여 청년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창업공간 지원: 공간이용 지원(임대료 감면), 1년+1년 연장, 관련 교육 지원 • 청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테크, 취업, 마음치유 등 운영 예정 • 청년정책네트워크 지원: 분과회의 및 총회, 간담회 등 |
| 17 | 서천군 | 다함께 상생하우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12월 현재 설계중으로 23.6~7월 착공 후 24년 준공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함께 상생하우징 S/W 사업으로 청년 및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재 용역업체 선정 완료하여 지원대상 등 조율 중이며, 23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임 |

| 구분 | 시군 | 센터명 | 운영 프로그램 |
|----|-----|------------------|--|
| 18 | 청양군 | 청년활력공간 청년la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창업 지원 : 누구나가게 운영(6개월운영, 공간이용및공공요금지원) • 청년 프로그램 운영 : 청년멘토 프로그램 운영, 청년심리상담 • 청년 네트워크 지원 : 총회,임시회, 간담회 등 |
| 19 | 청양군 | 블루칩하우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창업 지원 : 누구나가게 운영 • 일자리정보센터 : 평일 09시~18시 • 세어하우스 : 원룸형 세어하우스 |
| 20 | 홍성군 | 미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서비스 지원 : 취·창업, 주거·금융 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공간 운영 • 청년창업지원: 청년창업가들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점포 임대 |
| 21 | 예산군 | 청년문화복지 플랫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정 |
| 22 | 태안군 | 태안청년창업 비즈니스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창업 지원 :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 청년 교육 지원 : 청년 창업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추진 • 청년 네트워킹 지원 : 청년들의 네트워킹 및 코워킹을 위한 교육실 등 개방도내 시군 청년센터 프로그램 현황('22년말 기준) |

충남 시군 청년센터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자리·창업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사회·인성교육 및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활동지원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시군단위 청년센터 공간규모는 차이가 있다. 규모는 당진시 청년나래(3311㎡)가 가장 크고 아산시 1호점(1095㎡)과 함께 공주시 청년센터(867㎡)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 금산군(135㎡), 청양군(208㎡)을 비롯한 복수 청년센터가 있는 지역의 경우 거점을 제외한 다른 센터공간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다.

공간적 기능을 보면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회의실 등) 및 공유오피스, 교육지원공간 등은 공통적이며 공간규모가 큰 시군청년센터들은 북카페, 다목적홀, 컨퍼런스룸, 공유주방, 키즈카페, 상담실 등 다양한 청년 생활의 수요에 부합하는 공간을 갖추고 운영하는 편차가 있다.

조사결과와 충남 청년센터의 방향

현재 국내 청년정책의 개념과 방향은 전반적인 청년의 삶에 대한 질적 향상 지원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0년대 정책초기 청년은 일자리지원 및 실업문제 극복 등 경제적 차원 지원대상이었으나 문재인정부 이후 주거, 복지문화 등 청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청년정책의 확산은 청소년기와 다른 성인진입시기, 사회초년생에 대한 지원의 접근과 함께 결혼 및 출산인구 하락의 사회적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광역단위 청년센터는 정책기반강화, 청년활동지원, 청년성장지원의 기능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광역차원의 청년센터라는 점에서 현장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지원시스템 마련, 상호교류의 기회 제공 등 효과적 정책추진체계 구축이 공통적이다. 이와 함께 시군의 청년정책 현장 지원을 위한 정책활동이나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 거시적 미래수요 대응과 간접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네트워크 차원에서 소속 시군 청년센터의 자원을 연계하고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시군별 센터 기능의 균질화, 보편화 위한 지원의 역할도 함께 수행함을 볼 수 있다.

충남 시군 청년센터 또한 지역별 정책의 관심도와 예산규모에 따라 물리적, 기능적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시군 센터들의 공간 및 예산 등 운영에서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청년이 지원받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충남 청년센터 또한 「청년기본법」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년 일자리 및 취창업에서 확대되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반적 지원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앞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충남의 광역차원 청년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의 방향이 필요하다.

우선 충남 광역차원 청년센터는 현장의 시군 청년센터가 효과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 확립, 조사연구, 정책개발 등 정책지원 방향이 적절하며 시군과 역할 배분이 필요하다. 광역단위 청년센터는 충남의 시군 광역센터가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 역할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충남에서는 현장에서 청년센터들이 균등한 청년 서비스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편적 차원의 교육, 홍보, 플랫폼 등 기반 마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도 광역차원에서 보편적, 균등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센터홍보, 공통플랫폼 운영 등의 기반 마련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충남 광역차원에서 청년센터는 시·군 청년센터의 유기적인 관계구축 및 협력활동 수행을 위한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네트워크 기회제공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충남 청년센터가 중심이 되어 각 시·군 청년센터들과 정기적·비정기적 간담회 및 교류의 장을 형성하고 센터운영 및 정책활동의 의견을 교환하는 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충남의 청년센터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들에 대한 청년참여와 교육, 주택, 복지, 문화관광 등 다양한 도 정책분야와 청년 연계방안 모색 및 추진체계 마련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관련된 부서 및 소속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지역 청년센터 및 청년들과 연계활동을 수행하고 타 부서 관련 정보들을 시군 청년센터에 적극 공유 활동이 효과적일 것이다.

나가는 글

인구감소와 청년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유입을 위한 정책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청년센터는 이러한 청년정책이 구현되는 현장이며 지원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 청년센터의 구축 운영은 광역이라는 행정 및 지역적 범주의 특성상 현장에서 직접 청년과 대면하는 시군의 청년센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정책지원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충남에서 청년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청년센터의 기능은 현장에서 청년들의 수요와 요구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여 지역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열린 마당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활용법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활용법

이상희 | 천안YMCA 시민사업팀장

1992년, 인류 앞에 놓인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체결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첫 번째 국제협약이다. 1997년, 교토의정서가 체결되어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처음으로 명시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였으나 많은 국가들의 탈퇴로 실질적 효력이 약화되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지구 온도 1.5℃ 상승을 막기 위해 선진국만이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5년마다 제출하기로 규정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가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도 유엔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해 2021년부터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을 6월에 개정하고, 9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정부가 매년 제출해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국가 예산을 배분하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사업 운영 등 재정운용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로 2023년 정부 예산안부터 도입되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국가정책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하고 점검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한계가 명확했다. 2023년 정부 전체 예산 639조 원 중 1.86%인 11.9조 원, 세부 사업 8,435개 중 3.41%인 288개만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사업으로 선정하여, 정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 대상 사업이 너무 적었다. 또한 288개 대상 사업에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제외되고, 온실가스 배출을 일부 '감축'할 수 있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 재정이 감축사업과 배출증가사업에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얼마 전 발표된 2024년 국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대신 오히려 후퇴된 상황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 예산 규모는 10조 8,776억 원으로 2023년(11조 8,828억 원) 대비 약 5.2%가 줄었다. 또한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의 대상이었던 288개 사업 가운데 62개가 제외되고, 164개 사업은 예산이 감액되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 예산에도 감축사업만을 평가하고 배출사업을 제출하지 않은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

많은 한계점에도 실행되고 있는 국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준비와 대응의 속도가 다소 더딘 편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실시할 근거가 생겼으나,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개정이 요원한 상황이다.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대전시 대덕구는 2022년 예산안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4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칭은 기후예산제, 탄소인지예산제, 기후위기 영향평가, 탄소인지예산제로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개별 사업이 탄소배출 및 감축,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류(태깅)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보다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을 제시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경우 부산시, 서울시 은평구와 함께 2022년 말 환경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최종 결과보고서 공표를 앞두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역시 국가와 마찬가지로 배출사업을 제외한 감축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제도의 한계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0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성인지예산의 경우 성평등 관점에서 현재 예산과 정책이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성인지적 지표가 남·여의 동일성으로 왜곡되고 일부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하는 한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을 성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변화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인지예산제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민간연구소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을 위해 모니터링과 실험, 제안을 하고 있다.

이후연구소와 녹색당은 탄소배출의 수치 산정 방식이 아닌 기후생태 및 영향 당사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분류하였다. 기후정의 관점에서 예산편성 내역을 분류할 수 있는 부문지표(재난적응, 생태적회복, 불평등 완화)와 예산편성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개입지표(증액, 감액, 전환, 감시)를 개념화하였다.

광역자치단체 1곳(충청남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도시 1곳(원주시), 농어촌 지역 1곳(신안군)을 선정하고, 예산을 분석하였다. 인건비성 경비, 출연금, 보상금 등 비대상 사업을 제외하고, 2022년 본예산 기준 분석대상의 예산 비율은 충청남도 56.8%, 원주시 66.7%, 신안군 61.3%로 일반예산 중 많은 비중을 포괄하고 있다.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과 나라살림연구소가 참여한 ‘우리 모두의 기후예산’은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서울시 기후예산서가 일반회계 기준 10%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1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신호등’을 진행했다. 시민들에게 각 분야의 활동가들이 서울시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들은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빨간색), 감축(초록색), 혼합(노란색)으로 분류하여 서울시 예산의 탄소배출 현황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경기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온실가스 감축을 4가지 지표(감축, 배출, 복합영향, 중립)로 나누고, 2023 수원시 예산 중 1억 원 이상 665개 사업을 대상으로 주요 부서별 예산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틀과 지표를 개발하고, 그 기준에 따라 탄소중립 기후정의 예산서를 작성하며, 지역 내 확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조례 표준안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천안시를 비롯해 각 지역의 기후·환경활동가들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배출 현황을 가시화하기 위해 예산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기후위기 관점에서 수립되지 않은 사업의 탄소배출 파악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목적과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세부 사업계획서를 확인하고, 기사를 검색하며, 토론 과정을 거쳐 기후예산 태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숫자로 된 예산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문턱이 높는데, 세부사업계획서 등 이미 작성되어 있으나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주요한 자료는 별도의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가 법적 절차에 따른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시민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주체로 함께할 수 있으려면 행정자료에 대한 적극적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 참여형 예산 과정인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기준으로 예산을 검토하고, 대안예산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도 정비와 함께 각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현황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보완되어야 한다.

충청남도는 올해 당진시를 시작으로 청양군까지 도내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탄소중립 실천·확산 릴레이 대회를 개최했다. 청사에서 일회용품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하는 등 시민과 공무원의 실천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선언과 개인적 실천을 독려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상 기온에 따른 폭염과 폭우, 농산물과 인명피해 등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너무 가까이에 있다. 정책을 숫자로 구현하는 예산서에 기후정의의 관점으로 온실가스 배출사업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늘리는 관점을 담아 지금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



언론이 바라본 충남



한반도 중심 충남...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핵심으로 우뚝

한반도 중심 충남...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핵심으로 우뚝

이종익 | 서울신문 기자

△ 4개 시도 ‘특별지자체’ 구축 가속

- 세종·대전·충남·충북 교통 통합
- 미래 모빌리티 등 전략산업 육성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11월 1일 기준 5,179만 2,272명으로 전년 대비 4만 5,799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인구는 2,612만 4,421명으로 전체 인구의 50.5%를 차지했다. 2017년 수도권 인구 비율이 49.6%인 것을 살피면, 인구는 감소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서울에 정치·경제·생활 등 우리나라의 모든 핵심 사회역량이 집중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수도권 과밀 현상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수도권에 대응해 단일의 경제·생활권 등을 형성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독립적인 의사 결정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다.

대한민국 특별지자체의 중심에 바로 충남이 우뚝 서 있다. 충남이 세종·대전·충북 등 4개 시도와 힘을 합쳐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이 본격화 됐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추진은 4개 시도가 협력해 수도권 일극화로 기울어진 국가 균형 발전의 무게중심을 바로잡아 충청권을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4개 시도는 인구만 560만 명이다. 특별지자체가 되면 4개 지역 교통을 통합 연결하고 문화관광·산업기반 등 지역 자원을 공유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 지방 소멸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4개 시도는 지난 1월 출범한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통해 특별지자체 출범에 필요한 규약을 만들고 조례 개정과 공동사업을 발굴 중이다.

특별지자체가 출범하면 첨단바이오 헬스·미래 모빌리티 부품 등 전략산업 공동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 광역교통망 확대로 4개 시도 거점도시를 30분 내, 전 지역을 50분 내 연결하는 초광역 생활권도 연결된다.

4개 시도는 최근 민간 기업 연합체와 '초광역 도심항공교통(UAM)' 구축도 시작했다. UAM은 전기동력·저소음 항공기, 수직이착륙장 기반 차세대 첨단교통체계다. 향후 '안면도~국립세종수목원~속리산국립공원~단양' 등 충청권 주요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관광형 도심항공교통망 조성이 추진된다.



△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 합의

- 내년 3월 행안부 승인 후 하반기 출범 목표
- 4대 광역의회 4명씩 16명 구성 합의

특별자치체의 한 축인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의 의회를 구성하는 ‘충청권 초광역의회’도 내년 하반기 출범이 가능해졌다. 애초 난항이 우려됐던 의원 배분 문제도 4개 시도 균등 배분으로 최종 합의됐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 의회는 초광역의회 의원정수(16명), 의원 임기(2년), 의장(1명) 및 부의장(2명), 의회 의결 사항, 의회의 운영, 의회사무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규약(안)에 대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1차 합의를 끌어냈다.

애초 충남도의회가 2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대표성을 반영한 의원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끌어 온 충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선 균등하게 초광역의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특별자치체’ 출범을 위해 합의된 규약(안)을 2024년 1~2월 중 입법예고를 거칠 예정이다. 출범은 4개 시도 의회의 의결과 3월 중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목표다.

시도 경계를 넘어선 특별자치체가 충청권의 동반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고 지방시대의 새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
A to Z조직 내 소통과 인권 실태를 진단해 본
2023년 충남연구원만의 인권영향평가¹⁾

충남연구원 | 강마야, 이민정, 임형빈, 장창석, 정봉희, 제수진, 최윤정

2023년 충남연구원
인권영향평가 개요

2023년 충남연구원 인권영향평가는 크게 ① 2022년 실적분에 한해서 충남연구원 경영활동 중 인권경영체계 구축, 공급망 및 지역사회 인권증진 보호 관련하여 ‘공공기관 인권경영 체크리스트’에 입각한 기본 인권영향평가, ② ‘조직 내 소통과 인권’ 실태조사와 진단을 통한 특별평가로 구분하여 진행했다. 2022년과 동일하게 부서별, 직급별 내부 연구진을 구성하여 참여형, 문제해결형 연구과제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뜻깊었다.

특별평가인
[조직 내 소통과 인권]
실태조사 개요

- ◆ 조사명 : 인권영향평가 특별평가 [조직 내 소통과 인권] 실태조사
- ◆ 조사목적 : 조직 내 소통 정도 진단, 애로사항 해결 및 방안 모색
- ◆ 조사기간 : 2023.05.24.(수) ~ 2023.06.06.(화), 13일 간
- ◆ 조사주관 :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
- ◆ 조사방법 : 구글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한 모바일 설문(URL)
- ◆ 조사대상 : 총 125명 대상(2022년 12월 말 재직자 기준)
- ◆ 최종 응답자 : 125명 중 58명(회수율 46.4%) * <표 1> 참고
- ◆ 조사내용 : 6개 부문, 28개 항목(객관식 27개, 주관식 1개)
 - I. 내가 “내 스스로”를 진단(4개 항목)
 - II. 경영진(보직자)에 대한 “구성원”의 진단(4개 항목)
 - III. 구성원에 대한 “경영진(보직자)”의 진단(4개 항목)
 - IV. 구성원 모두가 조직 전체에 대한 진단(6개 항목)
 - V. 소통과 인권, 그리고 방안(6개 항목)
 - VI. 인적사항(4개 항목, 모두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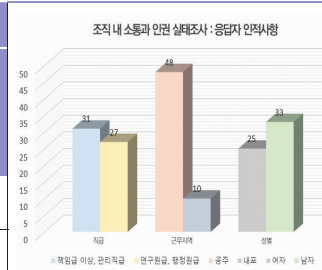
1) 자료 : 강마야.이민정.임형빈.장창석.정봉희.제수진.최윤정(2023), 2022년 충남연구원 인권영향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현안과제연구, 충남연구원



참여연구진 회의 장면

[표 1] 응답자 인적사항(N=58)

| 구성원 & 경영진 | | | 직급 | | 근무지역 | | 성별 | |
|-----------|-------|------|--------------|------------|-------|-------|-------|-------|
| 구성원 | 경영진 | 결측값 | 책임급 이상, 관리직급 | 연구원급, 행정원급 | 공주 | 내포 | 여자 | 남자 |
| 46 | 11 | 1 | 31 | 27 | 48 | 10 | 25 | 33 |
| 79.3% | 19.0% | 1.7% | 53.4% | 46.6% | 82.8% | 17.2% | 43.1% | 56.9% |



주 : 저자 작성함.

특별평가인 [조직 내 소통과 인권] 실태조사 분석결과

첫째, 특별평가인 [조직 내 소통과 인권]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참고).

5점 척도가 높은 순으로 배열했을 때, I.내가 “내 스스로”를 진단한 부문의 항목이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다. 가장 높은 점수인 4.30을 받은 항목은 “④ 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비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다.”이다.

반면, IV.구성원 모두가 조직 전체에 대한 진단 부문의 항목이 낮은 점수를 차지하였다.

가장 낮은 점수인 2.96을 받은 항목은 “⑥ (2022년 기준) 나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오프라인 소통채널(간부회의, 부서회의, 노사협의회, 행복발전소, 인권경영센터 자문기구 등) 장점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다.

이 지점은 충남연구원 조직이 좀 더 노력해야 할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주 : 이번 원고는 강마야 외(2023)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 및 재구성함. 이하 표의 출처 또한 이로부터 나왔기에 별도의 표기는 생략함(저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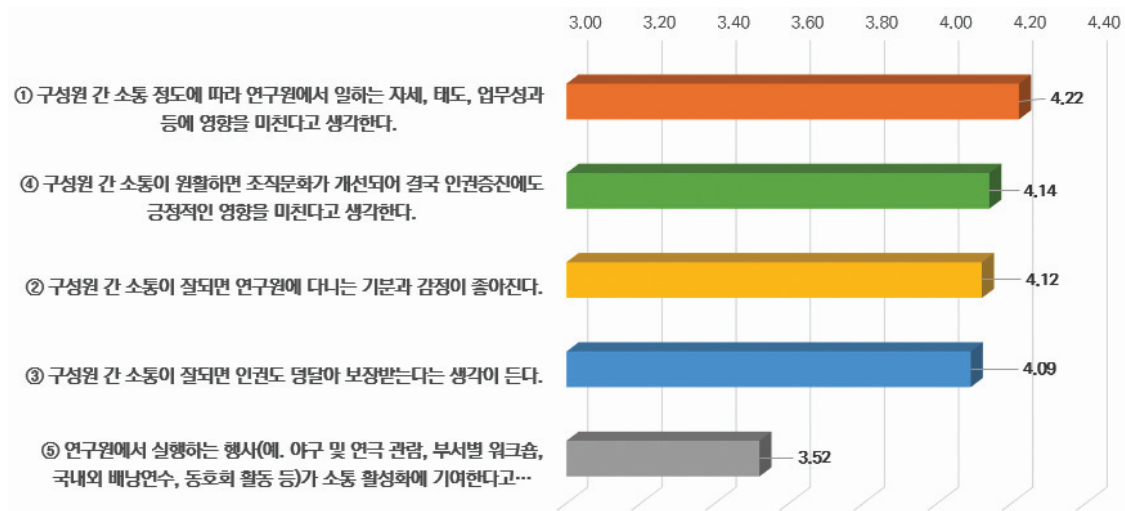
[표 2] [조직 내 소통과 인권] 실태조사 분석결과 요약

| (부문별) 항목 | 5점척도 평균값 |
|---|-------------|
| (I.내가 “내 스스로”를 진단 부문) ④ 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비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 4.30 |
| (I.내가 “내 스스로”를 진단 부문) ①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노력하였다. | 4.10 |
| (I.내가 “내 스스로”를 진단 부문) ② 나는 화합하고 협동하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노력하였다. | 4.05 |
| (I.내가 “내 스스로”를 진단 부문) ③ 나는 조직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 3.91 |
| (IV.구성원 모두가 조직 전체에 대한 진단) ⑤ (2022년 기준) 나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채널(사내 메신저,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 장점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3.37 |
| (IV.구성원 모두가 조직 전체에 대한 진단) ③ (2022년 기준) 나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연구(혹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 3.32 |
| (III.구성원에 대한 경영진의 진단) ① (2022년 기준) 구성원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비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 3.29 |
| (III.구성원에 대한 경영진의 진단) ② (2022년 기준) 구성원은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를 긍정적으로 수용,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 3.29 |
| (III.구성원에 대한 경영진의 진단) ③ (2022년 기준) 구성원은 연구(혹은 관리업무)와 관련한 주요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3.29 |
| (II.경영진에 대한 구성원의 진단) ③ (2022년 기준) 경영진(보직자)은 연구(혹은 관리업무)와 관련한 주요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3.25 |
| (II.경영진에 대한 구성원의 진단) ① (2022년 기준) 경영진(보직자)은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가이드를 제공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 3.21 |
| (III.구성원에 대한 경영진의 진단) ④ (2022년 기준) 구성원의 노력으로 전반적인 소통 분위기가 개선되었다. | 3.21 |
| (II.경영진에 대한 구성원의 진단) ② (2022년 기준) 경영진(보직자)은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를 구성원과 소통하면서 공유하고자 노력하였다. | 3.19 |
| (IV.구성원 모두가 조직 전체에 대한 진단) ① (2022년 기준) 나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부서 간 연구(혹은 관리업무)에 있어서 소통이 원활하여 상호 협업이 잘 이뤄지는 편이다. | 3.13 |
| (IV.구성원 모두가 조직 전체에 대한 진단) ② (2022년 기준) 나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연구량(관리업무량)과 상황을 고려한 업무지시, 보고, 피드백을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 3.12 |
| (IV.구성원 모두가 조직 전체에 대한 진단) ④ (2022년 기준) 나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연구(혹은 관리업무) 수행 및 다양한 제안 결과가 대내외적으로 공유되고 확산되고 있다. | 3.05 |
| (II.경영진에 대한 구성원의 진단) ④ (2022년 기준) 경영진(보직자)의 노력으로 전반적인 소통 분위기가 개선되었다. | 3.04 |
| (IV.구성원 모두가 조직 전체에 대한 진단) ⑥ (2022년 기준) 나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오프라인 소통채널(간부회의, 부서회의, 노사협의회, 행복발전소, 인권경영센터 자문기구 등) 장점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96 |

주 : 저자 작성함

둘째, 실태조사 중 [IV. 소통과 인권, 그리고 방안] 부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1〉 참고).

5점 척도가 높은 순으로 배열했을 때, “① 구성원 간 소통 정도에 따라 연구원에서 일하는 자세, 태도, 업무성과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4.22점)”, “④ 구성원 간 소통이 원활하면 조직문화가 개선되어 결국 인권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4.14점)”, “② 구성원 간 소통이 잘되면 연구원에 다니는 기분과 감정이 좋아진다.(4.12점)”, “③ 구성원 간 소통이 잘되면 인권도 덩달아 보장받는다는 생각이 든다.(4.09점)”, “⑤ 연구원에서 실행하는 행사(예. 야구 및 연극 관람, 부서별 워크숍, 국내외 배낭연수, 동호회 활동 등)가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3.52점)” 순이다. **대부분 항목이 4점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충남연구원 인권경영 정도가 조직 구성원 소통 정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림 1〉 실태조사 중 [IV. 소통과 인권, 그리고 방안] 부문 분석결과(5점 척도 평균값)

주 : 저자 작성함

2023년 충남연구원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향후 과제

앞서 제시한 분석결과에서도 보듯이 충남연구원 구성원은 소통 방식 중 오프라인 정보공유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반면, 충남연구원 구성원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조직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 해결 노력은 부족하다는 반성을 함도 알 수 있었다.

충남연구원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① 연구원 조직에 바라는 사항, ② 구성원 스스로 실천할 사항 모두를 균형적으로 제안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번 인권영향평가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내놓은 소통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표 3〉 참고).

① 연구원 조직에 바라는 소통 활성화 방안의 대표적인 예는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전 직원 분기별 전체회의 개최' 등, ② 구성원 스스로 실천할 소통 활성화 방안의 대표적인 예는 '나의 연구과제 시작-진행-결과 전체 시스템에 투명한 공개' 등을 도출하였다.

향후 **충남연구원에게 주어진 과제는 구성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연구과제 수행과정의 다양한 참여와 공유활동, 대인관계 소통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를 제안한다.** 경영진 노력뿐만 아니라 구성원도 제3자 입장으로 관망하는 자세가 아닌 당사자로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표 3] [조직 내 소통과 인권] 실태조사 분석결과 요약

| 구분 | 주요 내용 |
|------------------|---|
| ① 연구원 조직에 바라는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전 직원 분기별 전체회의 개최 • 노사협의회·노조·원우회·행복발전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 •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 재활성화 • 인권경영센터 자문기구 확대화 및 회의 결과 공유(정보공유) • 충남연구원 소통 우수사원 표창 신설 |
| ② 구성원 스스로 실천할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연구과제 시작-진행-결과 전체 시스템에 투명한 공개 • 푸쉬형+온오프라인 믹스+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연구결과 확산 • 인사캠페인 진행 및 참여 독려 • 연구원 생활 속 상시소통 캠페인 전개 • 자기성찰 프로그램 운영 • 포스터를 활용한 계도운동(예. 인권친화적일터 가이드라인(안) 포스터) |

주 : 저자 작성함

〈참고문헌〉

강마야, 이민정, 임형빈, 장창석, 정봉희, 제수진, 최윤정(2023), 2022년 충남연구원 인권영향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현안과제연구, 충남연구원.

연구원 소식



충남 서남부권 균형발전... 농업·농촌 패러다임 전환 필요

충남 교통인프라 구축 등... 국가 균형발전 견인

충남연구원, K-국방의 미래 위한 선제적 대응 모색

충남연구원, 2023 연구성과 발표회 성황리에 마무리

연구원 소식 01 ▶▶▶▶

충남 서남부권 균형발전... 농업·농촌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산업구조·성장 중심이 아닌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높여야

충청남도 농업·농촌 균형발전은 '농업의 본질적인 농촌성을 복원해가는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여전히 균형발전사업은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어 정착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수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노동력, 자본·시설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농업·농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충남연구원(원장 유동훈)은 “충청남도 서남부권 농업·농촌 균형발전 전략 구상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연구원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은 “충남 농업·농촌분야 균형발전 전략은 △토지(농지전수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 △노동력(청년농 단계별 육성 및 생활정착지원 종합정책) △자본 및 시설(맞춤형, 보급형 등 다양한 스마트팜 사업 추진) 등을 중심으로 구상해 볼 수 있다”며 “또한, 농민을 위한 촘촘한 소득안전망 구축은 물론 농촌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통합돌봄과 같은 사회안전망 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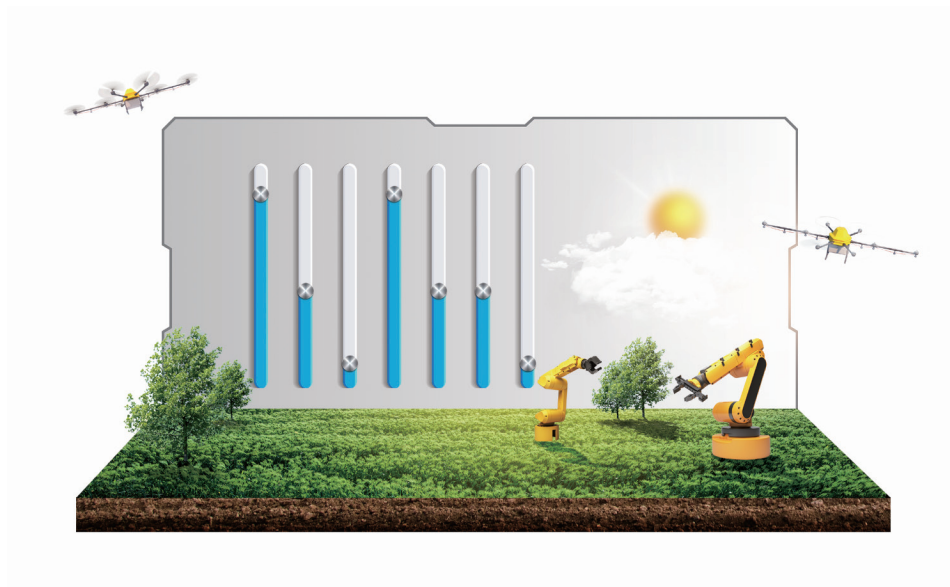


그러면서 “특히 충남지역 농지면적 중 50대 이하가 소유한 비중은 30.3%인 반면, 60대 이상이 69.7%를 차지하는 등 고령의 농민이 많은 편”이라며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통합컨트롤이 가능한 행정조직을 구축해 체계적인 정책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마을학회 일소공도연구소 구자인 소장은 “충남 15개 시군 간 불균형뿐만 아니라 시군 내 읍 소재지와 면 단위 이하 마을 간 불균형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정부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은 읍면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군계획을 따라가다 보니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현장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체 세움 협동조합 복권승 이사는 “현재 스마트팜은 초기투자비용이 높고, 선택의 폭이 좁은 초기 시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서남부권의 균형발전 전략은 귀농귀촌, 사회적경제, 교육사업, 6차산업화, 관광·문화자원 등 농업과 연계한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로컬리즘에 기반한 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지난해 말부터 분야별 연구진들이 한데 모여 충청남도 균형발전을 위한 TF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 소식 02 ▷▶▶▶

충남 교통인프라 구축 등... 국가 균형발전 견인

–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교통뿐만 아니라 물복지 개선도 시급한 과제

충청남도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도내 광역교통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현재 충남의 중장기 교통인프라 구축계획이 반영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40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등의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충남도를 넘어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11월 15일 충남연구원(원장 유동훈)은 “충청남도 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연구원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 김형철 연구위원은 “충남은 동서축 지역 간 교통망 구축으로 서해안지역 발전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충청권과 베이벨리 메가시티 구축에 있어서 미래 여건변화를 고려한 광역 모빌리티 교통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향후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와 지방형 항공 모빌리티(LAM, Local Air Mobility) 등이 적절히 혼합되어 운행된다면 교통·물류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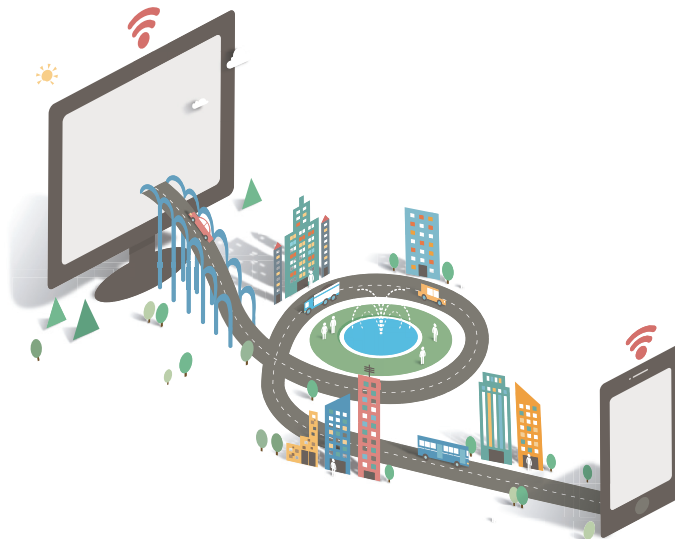
이어진 발표에서 K-Water연구원 최한주 수석연구원은 “연구원에서 발표한 전국 유역별 평균 물복지 종합지수를 보면, 금강유역이 ‘안정성(재난재해)’ 측면에서 열악했고, 시·군별로는 충남 서부권역의 물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며 “상·하수도 보급을 위한 기존 물인프라 확대 정책은 인구감소 같은 여건 변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반복되는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형평성, 안정성, 건강성에 기반한 보다 적극적인 맞춤형 물복지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충남연구원 오용준 기획경영실장의 좌장으로 국토연구원 김종학 선임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철도교통연구본부장, 충남연구원 한상욱·김영일 선임연구위원 등을 비롯한 균형발전TF 위원들이 참석해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종학 선임연구위원은 “서산공항을 도서 간 항공교통의 허브로 육성하는 전략과 충남형 UAM 정책 등을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 본부장은 “충남은 충청권 메가시티와 서산공항 건설 등 다양한 미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철도망 체계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철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 거점 연계, 지역경제 발전 등에 대한 전략 마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일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으로 인해 보령댐을 광역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충남 시·군의 물복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물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보다는 가뭄, 인구소멸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물복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 소식 03 ▷▷▶▷

충남연구원, K-국방의 미래 위한 선제적 대응 모색

— AI 기반 국방로봇 특화전략, 방산 전문인력 양성, 도민 인식 제고 등 제안



충남도가 <국방혁신4.0> 추진과제인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와 연계가능한 국방로봇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 국방산업 육성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10월 18일 충남연구원은 “K-국방의 미래를 위한 충남도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제8차 핵심정책 릴레이 세미나를 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도의회 윤기형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충남연구원 유동훈 원장, 육군교육사령부 박언수 AI·유무인복합전투체계개념발전과장, 충남연구원 과학기술본부 김진수 미래전략부장, 국방과학연구소 조진우 연구계획부장, 건양대 이종호 군사학과 교수, 충남도 전병천 방위산업팀장 등이 참석해 충남도 국방산업의 현재와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발표에 나선 충남연구원 김진수 부장은 “충남은 로봇 관련 제조업 비율이 40%('21년 기준)를 차지해 국방로봇 특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AI 기반의 소재·부품·장비가 결합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 및 방위산업 혁신 성과 창출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국방부의 <국방혁신 4.0> 추진과제인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와 연계가능한 국방로봇 산업 육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단기과제로는 (가칭)국방로봇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기관 선정 및 국비 확보, 국방로봇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군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를, 장기과제로는 ADD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활용한 국방로봇 육성 방안, 과학화훈련체계 시범사업 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육군교육사령부 박언수 과장은 “현재 국방부는 효과적인 작전수행을 위한 기반 구축, 미래전에 대비한 핵심기술 확보 등을 추진하여 향후 무인체계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에 육군은 △AI 기반의 드론(로봇)을 포함한 무인체계 조기 도입, △반자율형 혁신적 드론(로봇) 시범 운용 △미래 육군의 혁신적 부대구조와 편성 등을 통해 국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인 만큼, 충남도와의 연계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기형 부의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등 급변하는 정세를 보면서 K-국방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충남 논산은 이미 국방생태계의 최적지인 만큼, 우리나라 국방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동훈 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첨단 산업이 발전하면서 미래 국방산업은 전투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충남 논산·계룡을 중심으로 방산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한 특화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원 소식 04 ▷▷▷▶

충남연구원, 2023 연구성과 발표회 성황리에 마무리

- 민선 8기 충남의 정책 연구성과 공유 · 확산 및 미래 과제 도출



충남연구원(원장 유동훈)은 12월 14일 연구원에서 ‘2023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민선 8기 충남의 미래 정책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올해 추진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총 12개 세션에 모두 34개 연구과제가 발표되었다.

연구원은 충남도 및 시·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정책 선도(5개), 국책사업 지원(3개), 정부정책 지역화(4개), 지역문제 해결(4개), 도정 수요 대응(13개), 법정계획 이행(3개) 등 총 32건의 전략과제를 수행했다. 총 32명의 연구책임과 59명의 연구진을 비롯한 각 과제별 외부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심의·자문으로 참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가정책 선도형’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에 제시된 로컬크리에이터 정책, 행안부의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에서 제시된 관계인구 정책 등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고, ‘국비 확보’를 위해 RISE 기본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공모사업 지원, 도로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응 연구 등을 수행했다.

그리고 ‘정부정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위케이션, 주민자치회, 정부지원 축소 정책(도시재생사업) 적응 방안 등을 연구했다.

또한, 마을소멸 대응, 향내 정박어선 화재 예방 등 지역의 문제 해결과 내포신도시의 당면문제(공공기관 이전, 홍예공원 명소화 등) 해소와 내발적 차원에서 농공단지 조성 효과 분석 등을 수행했다.

충남연구원 관계자는 “2024년도에는 과학기술진흥본부와 정책사업지원단을 포괄하는 전체 연구조직이 전략과제를 수행하게 되고, 민선 8기 하반기 역점과제인 인구감소 대응, 新균형발전, 농정혁신 등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도 신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동훈 원장은 “이번 발표회에 나온 연구결과가 도 및 시·군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영상, 그래픽, 데이터 기반의 인포그래픽이나 정책지도 등 다양한 연구성과 확대와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충남연구원은 도정에 부응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연구 수행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원 발간물 ▶▶▶

CNI
정책현장



하천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본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의 필요성과 과제
오병찬 전임연구원



시민주도형 보행안전정책 현장모델
김원철 연구위원, 김윤식 연구원

인포
그래픽



2023 충청권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
최창규 선임연구원 · 오정민 전문연구원 ·
윤성준 전문연구원



충남 AI·메타버스 기반
도로·생활 안전관리체계
최창규 선임연구원 · 오정민 전문연구원 ·
윤성준 전문연구원

정책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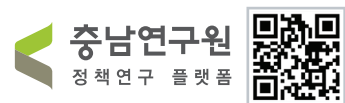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비 위축과
관광객 유치의 상쇄 효과
한석호 초빙책임연구원 · 김보람 연구원



충청남도 공공상수도 취락지역 분석 및 과제
김영일 전임선임연구원



QR코드를 스캔하면 YouTube채널로 연결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CNI 정책연구 플랫폼 채널로 연결됩니다.

열린충남

THE CHUNGNAM INSTITUTE

충남연구원은 도민의 더 행복한 미래를 열어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충남도민의 모습입니다.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충남연구원이 함께 열어하겠습니다.



우)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금흥동)
TEL 041-840-1114 FAX 041-840-1129 <http://www.cni.re.kr>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작은 실천”
본 인쇄물은 재활용 가능한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